

F1대회 체제개편 어떻게 이뤄질까

# 조직위가 마케팅·대회운영 주도

## KAVO 사실상 폐지 수준 역할 축소 조직개편 맞물려 내부 갈등 치열할 듯

전남도가 내년 F1대회를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르기 위한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이같은 구상은 대회 운영법인인 KAVO가 올해 F1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을 맡으면서 '합람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F1 조직위원회 및 KAVO간 기능 분산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부재'로 이어지면서 입체적 공조나 선제적 대응은 커녕 오히려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잇따른 뒤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물밑에서 논의됐던 F1 대회 조직 개편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고 있다.

◇개편 배경=올해 F1 대회 KAVO와 조직위원회로 나뉘면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보 공유나 협조체제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중동식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은 지난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조직위원회,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 대회운영법인간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체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통합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이번 대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입체적 공조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한계도 한몫했다. KAVO가 민간기업인데, 전문가들도 없다보니 경주장 건설, 홍보·마케팅, 대회 운영 등에서 책임있게 진행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홍행 참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AVO는 경주장 건설을 책임졌지만 대회가 치러질 때까지 경주장을 완공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티켓 판매·스폰서십 유치·TV 중계권료 등 마케팅 프로모션을 담당하면서도 기

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FOM에 147억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뒤 국내 중계권료로 얻은 수입은 15억1000만원에 불과했고 VIP 클럽인 패독클럽 구매를 대행하면서도 고작 1억16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입장권 수익도 고작 139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어떻게 바뀌나=KAVO의 역할은 형식적 주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 본부장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F1대회부터는 대회 조직위가 핵심역할을 맡는 것으로 운영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AVO는 필요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 슬림화시키고 민자조달의 수단이나 각종 계약관계 등의 형식적인 주체로 역할을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조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면서 앞으로는 KAVO가 더이상 마케팅 프로모션 및 대회 운영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앞서 간부회

의를 통해 "내년에는 경주장 건설 문제가 없어지는 만큼 관람객 유치 및 마케팅(기업 스폰서십 유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점에서 사실상의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 내에 운영과 입장권 판매·스폰서십 유치 등 수익사업과 마케팅 프로모션을 주도하기 위한 기능이 보강될 전망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대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공적 조직이 커짐에 따라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부 갈등 치열 전망=조직 개편과 맞물려 KAVO와 전남도간에는 견제와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남도의 이같은 입장은 올해 F1 대회의 가장 큰 책임이 KAVO에게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만큼 22일 열린 예정인 전남도의회 KAVO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정영조 대표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마음 한 뜻...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지난 20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에 참가한 광주지역 다문화 여성들이 5인 1조로 단체 이여 달리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677억원 '눈덩이 적자' 집중 추궁 경주장 지연·홍보 부실도 도마에

## 전남도의회 F1대회 행정사무감사 핵심쟁점

오는 22일 실시되는 전남도의회 F1대회지원본부 및 KAVO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장 건설 지연 및 추가 공사비용, 개최권료 및 수익 사업 성과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날 사무감사에서는 카보의 경영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비해 46개 항목의 요구자료를 넘겨받아 항목별로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주장 건설 지연 및 부실 관리-감독=경주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국내에서 개최 여부를 놓고 불안감이 커져 국내외 홍보·마케팅이 차질이 빚어지는데다, 결국 대회가 열리는 날에도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특히 경주장 핵심 시설인데도, 가설스탠드와 특수전자설비 등 일부 시설의 설계가 누락되는 이유로 1025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른 부실한 관리·감독, 트랙안전시설에 대한 허술한 개략 공사비 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서 왜 설계 부실을 가려내지 못했는지와 엉터리 건설 비용 산정을 놓고 KAVO와 전남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도 경주장 도입률을 78%에서 87%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와 SK가 사전 협의를 한 문제를 비롯, 중국산을 썼다가 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가설스탠드 계약 및 발주 과정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 다.

◇개최권료 및 적자 운영=경주장 건설 비용을 제외한 올해 대회의 적자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300~400억 원 훨씬 웃도는 677억원에 달하면서 첨단한 수익 사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 절반이 개최권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굴욕적인 개최권료 협상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카보는 F1대회를 한국에서 치르는 대가로 올해 개최권료 360억원을 FOM에 송금했고 앞으로 7년동안 매년 10%씩 늘어난 개최권료를 내야 한다.

도의회는 그러나 개최권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비싸다는 입장이어서 협상력 부족 및 개최권료를 낮추기 위한 재협상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F1매니지먼트인 'FOM'이 개최권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카보에 요구한 신용장(LC) 개설과정 및 LC를 개설하면서 올해 대회 개최권료 지급용 LC는 물론 내년대회 개최권료 지급용 LC까지 미리 개설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일 작정이다. 좌석별 유료 티켓 판매량 및 자유이용권 배포 현황, 기업 스폰서십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가스펠 찬양대회

## 프레이즈 페스티벌

후원: 광주 CBS, CTS가톨릭TV, 기독교신문, 광주일보, KJB, 광주은행, 광혜종합건설, JCL-story

예선: 2010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 본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본선: 2010년 12월 11일(토) 오후 2시 본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 PRAISE Festival

### - 가스펠 찬양대회 - 2nd.

참가문의: 062)605-0971

**■ 경연부문**

- ① 솔로 경연
- ② 그룹(중창, 찬양팀) 경연(2인 이상)

**■ 참가자격**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 시상부문** 대상,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솔로, 그룹)

◆ 그룹(중창 포함) 경연에서 직접 연주할 경우 및 창작곡일 경우 가산점 부여함

**■ 시상내역**

- ① 대상: 상금 300만원 / 부상 어쿠스틱 기타
- ② 금상: 그룹 상금 100만원 / 부상 고급 마이크 개인 상금 100만원 / 부상 MP3플레이어
- ③ 은상: 그룹 상금 50만원 / 부상 고급 마이크 개인 상금 50만원 / 부상 MP3플레이어
- ④ 동상: 그룹 상금 20만원 / 부상 고급 마이크 개인 상금 20만원 / 부상 MP3플레이어

※참가팀 전원 기념품 증정,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 입상자 특전:** 고3 수험생인 경우 본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

- 대상: 2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입학금 제외)
- 금상: 1년간 등록금 50% 장학금 지급(입학금 제외)
- 은상: 1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입학금 제외)
- 동상: 입학금 면제

※본선 진출자(팀) CD제작 및 그룹(찬양팀) 연주 악보집 제작

**■ 참가신청:** 본교 홈페이지

- ① 신청기간: 2010년 11월 1일(월) ~ 11월 26일(금) 까지
- ② 참가비: 솔로 40,000원 / 그룹 80,000원
- ③ 예선 지정곡 1곡(그룹: 내마음을 가득 채운 / 솔로·중창: 부르신 곳에서) 본인 자유곡 1곡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Guest**

장찬, D.M.T, 라파엘리워십팀, 나하은(내마음)

**2011학년도 광신대학교(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특전: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신학부	신학부	29
	국회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학과	9
예능	음악학과	11
합계		61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회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목	모집인원	비고
신학대학원	신학(Ph.D.)	4명	
	목회학(Th.M.)	15명	
신학대학원	신학박사(M.A.T.)	5명	
	목회학박사(M.A.T.)	10명	
신학대학원	신학박사(M.Div.)	90명	한·중·미
	교회학박사	35명	미·간지
신학대학원	신학박사(M.Ed.)	35명	미·간지
	신학박사(M.S.W.)	25명	

**:: 주요일정**

- ① 원서접수: 2010. 11. 2(화) ~ 11. 23(화)
- ② 서류제출기간: 2010. 11. 26(금)까지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전형일정
  -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교육대학원: 2010. 12. 1(수)
  - 신학대학원: 2010. 12. 3(금)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성금으로 술값 끊고 모금함 회수도 안해

## 복지부 공동모금회 종합감사 '총체적 방만' 드러나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내부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아 내놓는 각종 기부금이나 성금으로 운영되는 공동모금회 직원들이 유용수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일부 모금함은 제대로 회수도 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회와 전남지회 소속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산 부당사용에서 채용비리까지=광주지회와 전남지회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업무용 법인카드를 각각 4건과 14건씩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 43만원과 160만원이 부당 지출됐다.

모금함을 설치한 뒤 회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주지회와 전남지회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 및 대중이 용이시예 각각 배부한 모금함 91개와 350개를 회수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지회는 지난 2006년 1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에게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가짜를 부여한 뒤 채용했으며, 지정 기부금을 시실 등에 배부하면서 기부자 명의의 수령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직격탄'=보건복지부가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광주 전남지회 등 전국 15개 지회를 상대로 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당장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공동모금회 직원 48명(중복 포함)이 신규 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하거나 업무용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총 113명의 직원(중복 포함)이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국민의 온정을 직원들이 주머니에 찔러들듯 유용했기 때문이다. 업무용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총 136

건, 2147만6300원이었으며, 이중 124건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됐다.

민간주도의 성금 모금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12년 전인 1998년 창립된 공동모금회는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한 채 자의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의해 성금을 분배해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공동모금회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기부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매달 2만원의 공동모금회에 계좌이체하고 있다는 정모(32·여)씨는 "공동모금회의 비리 사실을 접하고 3년째 해오고 있는 기부를 중단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7억5453만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전문가들과 합의를 모금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